병 무 청

’15년 국정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
<table>
<tr><th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th><th>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th></tr>
<tr><td>1. 사회복무교육원 설립기간 동안 교육공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</td><td>

가. 시정・처리결과

○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일정 추가 반영

• 경인 및 대전교육센터 추가교육 실시 (’15.11. 9./160명)

○ ’16년 사회복무요원 교육규모 확대 운영

• 교육기간 : 연 52주 중 38주간 교육

* 교육제외 : 14주(혹서/혹한기 10주, 공휴일 포함 4주)

• 연간 교육계획 인원 증원

- 소양 기본과정 7,540명 증원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계</th><th colspan="2">소양교육</th><th colspan="2">보수교육</th></tr>
<tr><th>기본</th><th>리더</th><th>비상</th><th>소시오</th></tr>
<tr><td>’16년</td><td>30,960</td><td>28,640</td><td>1,000</td><td>720</td><td>600</td></tr>
<tr><td>’15년</td><td>24,870</td><td>21,100</td><td>2,520</td><td>800</td><td>450</td></tr>
<tr><td>증감</td><td>6,090↑</td><td>7,540↑</td><td>1,520↓</td><td>80↓</td><td>150↑</td></tr>
</table>

○ 복무기관 배치 후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先 직무교육, 後 소양교육 실시(연중)

• 대상 :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

나. 향후 추진계획

○ ’1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안정적 교육운영 실시

</td></tr>
</table>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2.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개선대책 및 보수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직무교육 개선 • 직무교육 실태 점검('15.10.13.~11. 3.) - 직무교육 시기·기간, 주요 교육프로그램 확인 - 기타 직무교육 적정성 여부 등 • 직무교육 적기·적정 운영 강조('15. 11. 20.) - 복무기관 배치 후 직무교육 조기 실시 -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작·운영 - 직무교육 적정성 평가 계획 등 ○ '16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계획 수립('16. 2.23.) • 직무교육 개선 - 복무기관 평가시 직무교육 충실도 반영 - 직무교육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철저 - 복무기관(전문교육기관 포함)과의 협력 강화 • 보수교육 확대 - 연수센터 개원 후 소시오드라마 등 보수교육 확대 1,250명('15년) → 1,320명('16년) → 1,520명('17년) - 비상과정 신설·자체운영(외부위탁 배제) 등 보수교육 자체 추진기반 구축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방안 지속 강구 ○ 보건복지부와 협조로 직무교육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 실시(연중)

<table>
<tr><th>시정·처리요구사항</th><th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th></tr>
<tr><td>3. 예술·체육요원의 영리활동 금지방안을 강구할 것</td><td>

가. 시정·처리결과

○ 예술·체육요원 소득 현황 파악('15. 9월)

• 대다수 예술요원 및 비인기종목 체육요원의 소득 수준은 일반인 평균소득 이하

○ 문체부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('15.10~11월)

• 일자/장소 : '15.10.23, 11.05./문체부 회의실

• 참석기관 : 병무청, 문체부, 대한체육회 등

• 주요내용

-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유

- 해당분야 종사 이외 영리활동 금지방안 모색

○ 영리활동 금지방안 검토 결과('15.12월)

<table>
<tr><th>일반적인 영리활동 제한
(해당분야 종사 포함)</th><th>광고 출연 등 특정
영리활동 제한
(해당분야 종사 제외)</th></tr>
<tr><td>◆ 해당분야 종사가 직업 수행과 연계, 제한 시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
* 선수 연봉, 국립극단 급여 등
◆ 복무 특성상 제한 곤란
* 先 국위선양자(국가기여)에 사후적으로 해당분야 종사 의무 부여
* 복무와 동시 국가기여 의무가 발생하는 일반 병역의무자와 복무특성이 다름</td><td>◆ 특정 영리활동 범위 선정이나, 이면계약 시 영리활동 확인 곤란
◆ 대다수 예술요원 개별활동자는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종사분야 이외의 영리활동 불가피
◆ 해외 광고 출연 제한으로 국위선양 기회 상실 등 부정적 요인 증가</td></tr>
</table>

⇒ 생계유지 등 현실적으로 영리활동 제한 곤란

</td></tr>
</table>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4. 심신장애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사유를 '수형자 등'과 구분하여 기록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병역처분변경 사유 구체화(백군기의원 대표발의) •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 중 '수형 등'을 '수형자'와 그 밖의 사유로 구분 •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인권 보호 * 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('16. 1.19.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5.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홍보로 병역인식을 제고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병역 기피자 공개제도 시행 홍보 실적 • 언론 보도 - 제도 시행 : KBS 등 60여 매체('15. 6.30.) - 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: 아시아투데이 등 27개 매체 ('15.12. 1. ~ 12. 9.) - 잠정공개대상자 심의 : KBS 등 40여개 매체 ('16. 2.15. ~ 2.21.) • 언론 기고 -「군복무, 자랑스러운 명예가 돼야」 (서울신문, '15. 6.26, 병무청장) -「병역 기피자, 이제 숨을 곳 없다」 (국제i저널, '15.11.30, 대구경북청 현역입영과장) -「병역기피자, 이제 숨을 곳 없다」 (서울경제, '16. 1.12, 병무청장) -「병역기피자 공개 원년을 맞이하여」 (도민일보, '16. 1.18, 경인지방청장) • 기획 보도 -「군복무 기피자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」 (파이낸셜, '16. 2.25, 병무청장 인터뷰) ○ 병무청 홈페이지 활용 제도 소개 • 홈페이지 내, 기피자 공개 코너 신설 • 공개 대상, 내용 및 절차 등 제도 전반 소개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SNS·홈페이지 등 다각적 매체 활용 지속 홍보 ○ 기피자 공개 단계별 홍보 실시(연중) • 잠정 공개대상자 소명 등 안내('16. 3월 말) • 병역 기피자 홈페이지 최초 공개('16. 12월 말) 등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6.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수형사유 병역감면 기준 완화를 특혜로 인식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 우세 • '14년 일반국민(1,092명) 설문조사 결과 - 면제 확대 : 찬성 49.9%, 반대 50.1% ○ 경미한 범법자 현역입영 배제 시 병역이행의 형평성 저하, 실효성 문제, 면탈 시도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 • 현역(상근) 입영자의 대부분이 사기/절도 등 경미한 범법자 • 대상인원이 소수로 입영적체 해소효과 미미 • 현재 병역법, 도로교통법,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자 이외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※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을 가진 사람 입영 현황(집행유예이상) (단위 : 명) '15년: 544 (499) / '14년: 440 (389) / '13년: 439 (391) / '12년: 540 (483) / '11년: 603 (533) * ( ) 상근예비역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수형자 처분 기준 관련 국민 의견 추가 수렴, 정책 추진 활용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7.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을 재검토 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유승민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•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의 현역복무 허용 • 병역법 개정보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'병역처분기준'에 포함하여 입법취지 달성 가능('16. 2월 국방위 법률 소위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'16년도 병역처분기준 개선('16년 상반기)
8.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충원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[1] 운영 (중기청 주관) • 2개('13년) → 15개('14년) → 24개('15년) ○ 중기청·산기협·병무청 합동, 대학교 방문 설명회 • 부산대, 연세대 등 권역별로 실시('15년, 10회) ○ 중기청 협조, 전문연구요원제도 홍보 동영상 제작·홍보 ※ 중소기업 편입인원 소폭 향상 : 407명('14년) → 418명('15년) ○ 중소기업 연구기관 미편입인원 중소기업 산업체로 배정인원 조정('15년, 400명) 등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속 확대 ○ 유관기관 합동, 대학교 방문 설명회 활성화(매월 1회) ○ 온·오프라인 채용박람회, 1:1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강화 ○ 업무여건 및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우수업체 위주 지정업체 선정 • 기술혁신 수상업체, 기술개발사업 우수기업 등

1)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사졸업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조건으로 석사학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위 취득후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9.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대체복무제도 운영방안 관련 국방부·병무청 검토회의 • 일시/장소 : '15. 9.23./국방부 • 참석 : 국방부(인력정책과장) 병무청(사회복무정책과장, 산업지원과장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운영방안 검토 중 ('16년 발표 예정) ○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산업지원인력제도 감축·폐지 등 중·장기 운영계획 검토 예정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0.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체육부대 등 특기자 선발권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병무청 선발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회('15. 9.17.) • 국방부(체육선수), 육군(신호정보병, 군사정보병, S/W개발병) ○ 병무청 선발 일원화에 대한 의견 접수('15.11.23.) • 국방부(체육선수) : 수용곤란 - 병무청 선발 시 선수선발 종목별 전문성 부족 - 선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구책 마련 시행 중 • 육군본부(신호정보병, 군사정보병, S/W개발병) : 동의 - '17년 1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선발 예정 ○ 국군체육부대 방문, 선발 일원화 재협의('15.12.7.) • 선수선발 심의위원회에 병무청 등 외부위원 참여 투명성 확보 요구 ○ 국정감사 후속조치결과 보고(한기호 의원, '15.12.11.) • 체육선수 병무청 선발 즉시 시행 곤란 • 선수선발 객관성·투명성 확보 방안 국방부 건의 * 선수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에 병무청 참여 ○ 체육선수 선발 관련규정 개선(국방부, '15.12.21.) •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선수선발 심의위원회에 병무청 참여 • 적용시기 : '16년 하반기부터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1.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현역병 입영 근거를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병역처분변경 후 현역병 입영관련 제도검토('15. 7~9월) •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및 법률자문, 각 군 의견 조회 ○ '16년 입법계획 제출('15.10.23.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병역법 제65조 관련조항 개정('16년 하반기)
12.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, 중·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홍철호 의원실 방문 설명('15. 9.25. / 국방부) • KIDA의 2014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 결과 ○ 국방부 업무 협의('16. 1.28.) •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판단 여부 추후 결정 * 병역처분 기준 지속 유지 여부 불분명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국방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*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판단여부 등

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3.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 불법체류자 및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대책 및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・처리결과** ○ 국정감사 후속조치계획 국방위원실 서면자료 제출('15. 10월) * 국적이탈 등으로 병역 불이행자 제재 관련 • '16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• '16년 하반기 관계 부처와 협의, 개선안 마련 ○ 병역기피 목적 미귀국자 형사처벌 강화 병역법 개정 • 내용 : 1~5년 징역(제94조제1항 신설) * '16. 1. 19. 공포, '16. 4. 20. 시행 ○ '병역기피 목적 국적변경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' 관련 보고(안규백의원, '16. 2.월) • 내용 : 정책연구용역(국적변경자 등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마련) 등을 통한 대책마련 후 보고 ○ 국외여행허가 신청 절차 강화 방안 마련 (손인춘의원 '16. 2.18. 대면보고) • 미귀국자 제재사항 안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신청절차 개선 •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전 귀국 독려 강화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병역기피 목적 미귀국자 형사처벌 강화 병역법 개정 규정(제94조제1항) 적용 형사고발 철저 * 시행일 : '16. 4.20.부터 ○ 국적변경자 등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마련 • 정책연구용역 수행('16. 5~9월) • 연구결과 검토, 제도개선안 도출('16. 9~10월) •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('16. 11~12월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4.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선발 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임기제 복무지도관 채용('15.12.28.) • 채용인원 : 1명(결원에 따른 충원) ☞ 상담관련 자격증 3개 보유 • 채용기준 :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채용 ○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기본계획 수립('16. 2.24.) • 복무지도관 채용시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'17년 복무지도관 증원소요 제기('16. 6월)
15.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·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'당정 국방정책조정회의' 안건 회부 건의('15.10. 2.) •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및 의원실 방문설명('15.10. 5.) ○ 당정 국방정책조정협의회 개최('15.10.27.) • 참석 : 김무성 대표, 김정훈 정책위의장, 정두언 국방위원장 등 7명, 국방부장관, 병무청장 등 < 당정협의 결과 > • '16년, '17년 각 1만명씩 군소요 추가 증원(2만명) • 산업기능요원 확대('16~'18년) : 기존 4천명+2천명이상 • 고퇴이하자 보충역처분 및 현역복무지원제도 도입 • 징병신체검사기준 강화로 현역자원 정예화 ○ 입영적체 해소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('15.12. 2.) • 지속적으로 추진실적 모니터링 등 분석 실시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6.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 사전선별을 강화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심리검사 전문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• 2차 심리검사 인력 13명 증원('15. 6월) - 임상심리사 : 27명('14년) → 40명('15년) ○ 심리검사도구 개선으로 검사결과 정확성 제고 • 인성검사 문항 확대('15. 1월) - 183문항('14년) → 203문항('15년) • 사고관련 척도 가·피해 위험군 특성 추가 반영 - 지배 : 냉담, 적개심, 지배 등 가해 위험군 특성 - 소외 : 낮은 주장성, 복종성 등 피해 위험군 특성 • 새로운 인성검사도구 개발 추진(KIDA주관) - 징병검사 대상자 시험적용 : '15. 8월(서울청), 10월(전국청) - '17년 적용 예정 ○ 질병상태 문진표 개선 • 정신과관련 문항 확대('15. 1월) - <현행> 5문항 → <개선> 13문항 • 본인선택 시 질병상태문진표 사전 작성('15. 8월) ○ 심리검사 관련 징병검사 규정 개정('15. 1월) • '정밀관찰자' 중 치료필요한 자(7급) 경과관리 - 미치료자 4,013명 중 1,600명(39.9%) 치료시작 • 본인동의자 심리검사결과 가족통보 - 1,685명 가족통보자 중 732명(43.4%) 치료시작 • '정밀관찰자' 중 정신과 '정상' 판정자 심의위원회 회부 ○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확대 • 민간병원 위탁검사 예산 증액(3억원) - ('14년)630명→('15년)1,487명(실시 1,203명, 진행중 284명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○ 심리검사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('15. 6.29.~12.11.) • 사업명 : 심리검사결과 신체등위 판정 연계방안 등에 관한 연구 • 계약업체 :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• 계약금액 : 5,600만원 • 주요내용 - 군환경 적응 취약성 개념 정의 및 모형 제안 - 군환경 적응 취약성 모형 선별기준 및 활용 방법 - 병무청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등 ○ 「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개정·시행 ('15.10.19.) • 고혈압, 기질성 정신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현역입영 배제 등 ※ 개정 현황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추진 • 종합심리검사 인력 47명 증원 관련, 행자부와 협의 ○ 정신과 징병전담의사 연차별 증원(10명), 검사반별 복수 배치 • 4명('16년), 3명('17년), 3명('18년)

계	본문	강화	완화	기타	
				명확화	세분화 등
93	3	54	3	13	20